

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
제3차 학교폭력 대책단 회의
· 일시 : 6. 22(소회의실)



(www.moe.go.kr)

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 대책단 회의

2005. 6. 22

교육인적자원부

목 차

I. 교육부	1
II. 청소년위원회	1
III. 문화관광부	2
IV. 정보통신부	3
V. 경찰청	4
VI. 안 건	8
1. 학교폭력대책단의 성격	9
2. 기 타	9

I. 교육부

1. 5월 관계장관 회의 후속조치 결과

1.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 관련 교원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검토

- 정원문제는 장기과제로 추진(행자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)
- 우선 학교중심의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 기능 보완·강화
- * 중점추진과제 참조

2. 학교폭력에 성폭력 대책을 포함하여 추진(여성부 장관)

-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」에 '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강화'를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,
- 경미한 성희롱·성폭력(미수범 등)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책과는 별도로 각 시·도교육청에 기 설치(교육부 지침 : 성폭력·성희롱예방교육계획)된 「성희롱·성폭력심의위원회」에서 처리 중이고
- 다만,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의 가·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
 - 「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에 별도 규정
 -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 수사기관에 맡기거나, 전문상담·치료 시스템 마련 필요

3.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협의회 지역조직은 지역교육청(시·도교육청)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

- 교육부총리·청소년위원장 협의('05. 6. 2)
 - 국민협의회 지역조직 구성 방안 등 협의

2. 추진 현황(2/4분기 중심)

○ 자진신고 접수·처리 실적(3. 4~5. 31)

- 학교에서 자진신고 접수·처리한 것은 총 3,127명이며,
 - 학교에서 서면사과, 학교내 봉사, 사회봉사 처분, 각서징구 등 교육적으로 처리한 것이 1,309(41.9%)명이고,
 - 자진신고 학생과 상담을 하여 종결 처리한 경우가 1,240명(39.7%)이며,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학조치를 한 경우도 27명(0.9%)임
 - 또한, 가·피해학생이 분명하고, 조직적인 불량서클 등 사안 성격상 경찰과 협조처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에 통보한 경우가 551명(17.6%)임

○ 『실태조사기획위원회』 구성·운영(4. 1 ~)

- 목적 : 일진회 등 불량서클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·해체방안 강구
- 구성 :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교원 등 21명
- 대상 : 생활지도부장교사(800명), 보호관찰학생(750명), 초등학교 4학년~고등학교 3학년 학생(13,200명)

※ 결과는 학생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 방안에 참고할 것임.

○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

- 시기 : 2005. 5. 1 ~ 5. 31(1개월)
- 매체 : SBS 라디오 캠페인 및 무가지(METRO, FOCUS) 홍보

※ 부총리의 청소년 대상 메시지 전달 및 무가지 상단에 관련 내용 게재

○ 학교폭력 관계관 협의회

- 시기 : 2005. 6. 2 ~ 6. 4(2박 3일)
- 대상 : 시·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관, 장학사 60여명
- 주요 협의 내용
 - 시·도교육청별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 발표, '05년도 하반기 생활지도 계획 협의, 인권 존중 생활지도 규정 개정 방향 등
- ※ 4대폭력 근절대책 관련 정부 의지 전달(총리 지시사항 전파)

○ 학교폭력 추방 토론회 개최 활성화

- 시기 : 2005. 4. 20 ~ 5. 31
- 대상 : 학생회 주체, 교사-학부모-학생, 학교장 사례발표 등
- 추진실적

구 분	학생중심 토론회 (학생회)	교사·학부모·학생 토론회 (학교 주관)	학교장 사례발표회 (교육청 주관)
실 적	11,073회 실시	5,368개교 실시	10,188명 참가

○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

- 희망학교에 대한 시·도교육청 실사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설치동의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
- 전국 중·고등학교 중 약 739개 학교 설치 결정

선정학교 수(개)								
1대		2대		3대		4대		계
중	고	중	고	중	고	중	고	
209	156	99	82	42	44	39	68	739

3. 분석 및 평가

- 『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』 운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었으며,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경찰 및 학교의 노력으로 해체되었고,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시민단체, 의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효과가 있었음.
- 특히,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고, 상담자원봉사자의 지원을 통한 교내순찰과 상담실시,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과 관련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,
- 향후 우리부는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발생의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
 -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고
 -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활용 및 폭력 발생시 가·피해학생에 대한 선도·치료·재활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임
- 아울러, 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못된 소수에 의해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, 학교에서는 학생이, 사회에서는 조용한 다수가, 내 학교, 우리 동네, 내 직장, 우리 사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

4. 중점 추진과제

■ 학교 중심의 상담 네트워크 구축

<추진배경>

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,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, 평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

-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나 선생님 한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중심의 지역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토록 함

○ 모든 교원의 상담능력 제고

- 교원연수 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방안 연수 실시
- 신규 교원 연수시 집중 연수 실시
- 교사양성교육과정에 인권·상담 관련 강좌(실습) 이수 방안 강구
- 학교 자체연수 실시 및 토론회 개최로 상황 적용 능력 함양
- ※ 관련 메뉴얼 제작 배부(6월말)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('05.12)

○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

- 근거 :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
- 설치 : 초·중·고 10,509개교 중 7,752개교(73.8%, '04.12현재)
- 운영 : 전문상담 자격증 소지교사 상주로 상담의 효율성 제고
- ※ 자격증 소지교사('04. 8) : 전문상담교사(19,100명), 사회복지사·청소년상담사(1,599명)

○ 농어촌 학교의 연로교사 활용 상담활동 전개

- 농산어촌 중·고등학교의 연로교사 연수 후 활용(1교당 1명)
- 시기 : 연수 ('05. 8) → 활용('05. 9)
- ※ 농산어촌 중·고등학교 : 1,904개교(전체 중·고교의 약38%)

○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배치

- 시기 : 선발('05. 5) → 연수('05. 7~8) → 배치('05. 9, 308명)
- 활용 : 사이버상담망 구축 운영, 학교 ↔ 지역상담네트워크 연결

○ 상담자원봉사자 지원

- 역할 : 취약시간 교내 순찰 및 상담활동(주3회)
- 전국의 중·고등학교에 3,678명 배치·운영('05. 6.9 현재)

상담자원봉사자 배치 현황(명)					
청소년상담사	사회복지사	학부모	퇴직교원	기타	계
482	217	2,173	226	580	3,678

※ 기타 : 자원봉사센터, 주민, 보육교사, 독서지도사, 국악강사, 청소년선도위원 등

○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구축

- 학교 - 청소년상담원(청소년위) - 지역사회복지관(복지부) - 전문의료원 - 자원상담봉사센터(지자체) 등
- 전국 초·중·고교에 총 4,754개교 네트워크 구성 완료('05. 6. 9 현재)

협약체결 학교(개)						
청소년상담원	사회복지관	상담봉사센터	정신과의원	청소년선도위원회	기타	계
1,345	1,197	968	143	401	700	4,754

※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협약식 체결

5. 안내 사항

▣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 교체

교체 전	신 위촉 대상자	사유
문화관광부 전(前) 청소년국장 김두현	문화관광부 문화 산업국 국장	· 2005.5.1일부로 전(前) 문화관 광부 청소년국이 현 청소년위원 회에 편입
지방자치국장 이재충	자치행정팀 팀장(국장급)	· 이재충 지방자치국장의 지방 전출
청소년보호위원회 前위원 최영희	최영희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	· 위원 → 위원장으로 전직